

시장 낙오자도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기 다른 능력을 발휘하여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며, 이와 함께 사회는 영속과 번영을 이루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실패라는 그림자에 머무르게 되기도 하며, 이를 극복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도 동일한 삶을 살지 않으며 기회의 평등은 주어지지 않으나 결과의 평등을 담보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잘 사는 사회는 다분히 비현실적이며, 시장의 경쟁에서 안타깝게도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보니 우리 사회에서 성과의 지표로 대변될 수 있는 소득에서의 불평등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소득불평등의 존재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불평등은 정도에 따라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 자체보다 계층 간 이동성이다.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동일한 구성원으로 고착화되면 문제가 된다. 요컨대 계층 이동성이 저하되면, 소득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세대가 바뀌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심각한 경제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계층 간 적대감이 증대될 수도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계층 이동성은 지난 10년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폭이 크지 않고, 방향성 측면에서도 비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07년~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계층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으로 구분하고 계층 이동성을 분석해 보면 최근 들어 이동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년 기준으로, 2007~2009년 동안의 계층이동을 살펴보면 정채 가구의 비중은 73.2%였지만 2015~2017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75.5%로 나타났다. 3년 기준으로는 계층 간 이동에서 정채가구 비중이 70.7%에서 7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계층 이동에서 정채

가구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계층 이동성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계층 이동성의 하락은 그 폭이 크지 않으며, 2017년(2년 기준) 계층 상승 비율(11.5%)과 계층 하락 비율(13.1%)의 격차가 크지 않아 이동의 방향성 측면에서도 비관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한나라의 사회 및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낙오하여 계층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계층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층 간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동성이 향상되어야만 도전정신이 고취되어 사회적 혁신을 야기하고 이러한 성과는 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향유하여 사회는 성장·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계층 상승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면 취업과 관련한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하위층과 중산층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직인 가구주에 비해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일 경우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40%p, 임시직일 경우는 20%p, 자영업자일 경우 14%p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상향 계층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일자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시장에서 실패하여 소득계층이 하락하여도 스스로의 재기를 통해 계층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규제 완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근무시간 유연화를 통해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가구소득 향상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자리 이외에도 계층이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제도 정착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공정한 기회 및 경쟁, 그리고 공정한 성과 및 보상 등을 통해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도 스스로 재기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공고히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